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 김영기 (인)

일시	2009. 10. 28. 수요일
장소	의정부 녹양중학교
대상지역	의정부, 연천, 포천, 동두천
참가인원	교사 : 27명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취지가 서구적인 교육풍토에나 맞는 것이 아닌가. / 현실 고려않고 너무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 생각 존중하고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한다.*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조례의 실효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학생 개인이 불이익 걱정 없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다.* 두발, 체벌 같은 경우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두발, 체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제일 많다.* 소수학생들 지도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사와 대립하는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 학벌주의 대학입학 위주.. 여러 종류 강제학습이 교육의 효율이 높은 측면이 있다. / 강제학습 폐지하면 당장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예전 소규모 학교에서 지금은 학교의 규모가 커졌다. 교사에게 떠넘기는 풍토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교사들도 자율학습 원해서 하는 사람 없다.* 학생회의 등 학생들 의견 반영하는 것 관련, 현실적으로 많이 제약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체벌금지 운운하는데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하지 않는다.* 꼭 체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이놈들은안되' 이런 말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한다. / 체벌이 금지되더라도 지도를 포기하는 결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교사 학생의 관계를 냉정하게 보면 교사가 우위에 있는 것이 맞다.* 교사의 업무량이나 자율성을 부여하는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과거 이해찬 교육부총리 시절 수요자 중심 교육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교사를 신고하는 등 학교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우려된다./ 학생 지도에 많은 지장 우려된다.* 아이들 인권교육강화하자는 데에는 찬성한다.	

- * 자료집 10문10답은 학생들을 너무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 있다. 면학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질서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너무 이상적이고 탁상행정적인 답변이다.
- * 한반에 40명이 넘는 학생들 어떻게 지도하란 말인가.
- * 전반적으로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 교사들에 대한 복지가 미흡하다.
- *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되었다. 교육감 공약사항인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갑작스럽다.
- * 사전협의를 하는데 사전에 자료도 주지 않고 갑자기 의견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 김영기 (인)

일시	2009. 10. 30. 금요일
장소	수원북중학교
대상지역	수원 오산 화성
참가인원	교사 28명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 지도하기 무척 힘들다/ 내배째라 그런 식이다/ 한학기 다 끝나도록 말을 안듣는 학생들도 있고 대책이 없다.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지면 생활지도 파트는 어느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오히려 교권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 * 교권이 추락하는 마당에 무슨 학생인권조례인가. * 부록으로 있는 광주, 경남 인권조례 보았다. 경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조례안을 만들 예정인지 궁금하다. *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검토하였는지 궁금하다. *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 법을 꼭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 교육감 임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조례 만들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조례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 조례제정 취지는 공감한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들이 광주, 전남 사례들을 보면 국민의 일반적 기본권보다도 오히려 과도하게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소지품 검사 금지 이런 부분들이다. 일반 시민들도 경찰 불심검문을 받지 않는가. 소지품 검사가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심지어 무기를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 체벌을 금지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아닌가. 초중등교육법도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 *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 * 학생들 인권도 누려야 하겠지만 학생들의 의무들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한다. * 과도한 인권침해 실례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 조례제정 찬성하지만 선생님들이 학생 생활지도 하는 문제가 많이 우려된다. * 생활지도 문제 때문에 아이들 치마길이 같은 것부터 보게 되는 교사의 모습도 안타까운 일이다. 교사들도 생활지도 할 때 학생들의 인권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군사문화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인권에 내해 놓쳐 왔다. * 소지품검사 관련 심지어 흥기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사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텐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흡연문제 이런것은 도 대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생활규정이 있어도 학생들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 * 교권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결국 그 교사만 피해를 보는 결과가 된다.
- * 학생 이름표 착용 금지,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정하면 안된다. 예컨대 학생들이 의논해서 자주적으로 이름표를 착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학생들 의견 충분히 들어 자주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 체벌금지 규정 들어가면 안되고, 조례는 선언적인 정도를 넘어서면 안된다고 본다.
- * 두발자율화, 교복자율화 말도 안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다.
- *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어른들인 교사가 학생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 * 조례 관련 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 자율이 강조되게 되면 생활지도 할 것이 없는 것 아닌가.
- * 두발 문제도 그렇고 학생들의 책임감이 강조되어야 한다.
- * 복지에 대한 것들은 폭넓게 규정되어도 좋다고 본다.
- * 아이들이 충분히 참여하는 가운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의 능력과 수준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 * 아이들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자유를 누리는 인권신장 기회가 되면 좋을 것이다.
- * 총돌, 혼란 시기를 거치게 되면 창의성 교육이나 민주의식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조항들(광주나 경남 예를 보면) 좋다. 문제는 학교현장 폭력범들 문제같은 경우 다스릴 수 있는 칼자루가 없게 된다. 그저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인권 부여하면서 의무이행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 * 사회봉사, 교내봉사, 특별이수 이런 방법밖에는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는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나 권한이 먼저 교사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 * 학교의 전반적 여건, 예컨대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 전반적 여건이 먼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먼저 학교의 전반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 * 야간학습 제한에는 찬성한다. 좋아서 하는 교사 없다.
- *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교육여건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 * 교사의 잡무도 줄여야 한다. 그런 대책이 마련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순서이다.
- * 예컨대 명찰 같은 경우 교육적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학생들 이름을 불러주려면 명찰 없이는 힘들다. 일주일에 한시간 들어가는 반도 있는데 명찰이라도 있어야 학생들 이름을 부르며 다가갈 수 있다.
- * 치마길이 같은 것을 아이들이 줄일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등 아이들이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다.
- * 교원평가제도가 실시되는데 결국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뒷전으로 미루고 학과 수업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다.

사전협의회 보고서

보고자:이원일(인)

일시	11월 2일 (월)
장소	안산 광덕중학교
대상 지역	안산, 시흥
참가인원	교사 35명
협의 내용	
<p>*2000년도 초반 프랑스 공업계고등학교 시찰기회가 있어 방문하니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담임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업태도를 비롯한 생활지도면에서도 아주 좋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왜 그런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 1년에 20 - 30% 유급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 내면에는 학교의 규정에 의한 상,벌점제도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인권조례에도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내용을 있어야 하지 않은가?</p> <p>*학생지도에 있어 생활의 모든면(두발, 복장, 생활태도 등)을 학생인권에 맞추다 보면 교사의 인권이 추락될 소지가 있다.</p> <p>*학생생활지도(두발, 복장 기타 등)를 전적으로 학생부에 일임하는 것보다 학교의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 하고 상,벌점제의 객관적인 적용으로 학생들의 지도해야 한다.</p> <p>*인권에 대한 이해가 학생들에게는 부족한 것 같다. 또한 학생 상호간의 인격존중도 무시할 수 없다. 아울러 교사의 권위도 확립이 되어야 한다(미국에서는 생활지도만 전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서 그것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그 누구도 생활지도 선생님이 판단에 수긍하는 분위기가 있다)</p> <p>*인권의 핵심은 강제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학생이 공부에 떠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자율학습, 보충학습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인권=학생 자율권</p> <p>*현실적으로 학생인권을 존중하여 모두 풀어주었을 때 생활지도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p> <p>*현실에 맞는 법률정비, 학생/학부모/교사의 중립적인 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없이 무한경쟁으로 가다보면 학생은 학교의 뜻에 맞지 않게 됨으로 학교생활이 더욱 힘들어 진다. - 인성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p>	

사전협의회 보고서

보고자 : 김영기(인)

일시	2009. 10. 29. 목요일
장소	일산 장성중학교
대상 지역	고양 파주
참가인원	교사 20명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과제 10가지(설문지 뒷면)는 어떤 근거로 정리되었는지 궁금하다. 10가지 학생인권 과제들은 실제로는 거의 없는 문제들로 생각한다. * 소지품검사 거의 안한다. 두발, 복장 고양지역은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 * 교권침해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 * 체벌, 교사도 원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체벌도 거의 없다. * 인권교육강화는 찬성한다. * 학생인권조례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 자율학습 폐지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 제도적으로 먼저 사교육문제 등 교육문제들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학생체벌 거의 안하는데 조례를 만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 서양과 같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교육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보여주기 위한 조례 아니냐. * 비난의 화살은 모두 학교로 돌아온다. 학교로 모든 비난은 떠넘기면서 학생인권보장하라는 것은 모순이다. * 도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하달하는 등 학생인권에 관한 법적 효력있는 지도나 감독이 필요하다. * 자문위원회 만들고 오늘같이 사전협의 하는 것 조례만들기 기정사실로 해놓고 요식행위 아닌가/ 홍보도 충분히 안되 있고 사전자료 배포도 안되었고 오늘 여기 와서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첨 알았다. / 사전에 자료도 충분히 배포되어야 한다. *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큰데 인권과 접목해서 다루는 것도 문제다. 국가정책의 문제 아닌가. * 책자(협의회 자료) 내용도 학교 현장 너무 무시한다. 너무 서둘러서 조례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 급하게 조례 만들어서 학교 현장 교사와 관리자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 이론과 현장은 너무나 다르다. 1년반이라는 임기내에 교육감이 결과를 내려는 것이 옳은가. *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일인데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긴다. * 인권조례 만드는 것이 머가 급한가. * 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협의회 보고서

보고자 : 이원일(인)

일시	11월 3일(화)
장소	안양 비산중학교
대상 지역	안양 과천
참가인원	교사 28명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용의복장 자율화에 부작용이 있는가? 두발도 꼭 해야 하는가?*다양한 학생이 있는데 문제학생의 인권만 생각하지는 않는지?*인권이란 다수의 선량한 학생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조례! 무의미 하다. 학생 몸의 권리(두발, 교복등)등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으면서 어찌 가능하겠는가?*인권조례 제정방향이 바르게 가야지 소수 일탈 학생의 인권이 강조될까 염려된다.*조례제정! 학교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인데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처벌하지 않고 지도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단, 욕하고 지도 거부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겠는가?*한 학급 20명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다. 상주하는 상담교사에게 보내는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다. 시스템의 문제이다.*우리나라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에 대해서는 지지 않으려고 한다.*소수학생의 방해로 다수 학생이 피해보는 현상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학생의 자살원인이 왕따이지 교사원인은 아닐 것이다. 제시한 ppt자료는 방향을 잘못잡은 듯 하다.*인권존중이 체벌금지인가? 필요한 부분만큼 사랑이 있어서 교육적 체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체벌은 절대로 금지해야 하는데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한다.*학교가 지나친 온정주의에 바탕을 두면 안된다. 기본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 가와사키조례는 포괄적이고, 경남조례는 팔찌, 반지등의 세분화되어 있어 학교가 학생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라고 한다.*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공동체가 나아질 것이다.*법질서교육등 기본생활습관교육이 저학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영상자료를 통한 교육자료의 보급에 힘써야 한다.*학생인권조례를 기초로 학교공동체 눈치가 아닌 규칙에 의해, 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사인권 조례도 필요하다. 인권존중 학교문화 공동체 이루어 가자	

사전협의 보고서

보고자 : 곽노현 (인)

일시	2009년 10월28일 수요일
장소	용인 성지중학교
대상지역	용인, 평택, 안성
참가인원	교사 : 25명
협의내용	
<p>1.두발복장</p> <p>1)현행 제도 (규정)에 대한 생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생들의 가장 관심사가 두발 -책임 한계가 교사에게 많음-두발에 대한 지침을 교육부 (교육청) 이 정해 두어야 함-(자유화 희망 (약 6%) -경기도-교사의견-학생들의 의견대로 정한 규칙도 잘 이루어 지지 않으며 차후 대책이 없음 <p>2.체벌 문제</p> <p>체벌 없이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제시</p> <p>염색을 할 경우 제제근치는 어디 까지</p> <p>3.집단괴롭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생이 인권은 정해지나 교사의 인권이 보장이 않됨-학생이 인권이 있으면 교사의 강력한 권한 (사범) 이루어져야 한다.-중도 탈락 학생들의 문제 - 복학 하여 또 다른 일을 저지름 - 제제방법이 없다- 징계를 받아도 변화가 없는 경우 대책이 많지 않음 <p>4.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규 수업 종료 후 3시간 이내로◦술과 담배를 쉽게 구입하는 문제 →◦흡연자의 증가 →	

- 학생인권 보장하면 학생지도 더 침체된다. 학교선생 권한을 강화하지 않고 학생인권만 보장하면 안 된다.
- 학생생활지도 못한다. 문제를 보고도 못 본 체한다. 다른 애들 괴롭히는 학생이 누군지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 학생들의 술, 담배 접근이 너무 용이하다. 중고등학생에게 술담배 파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 특목고 등에선 교풍확립차원에서 엄한 두발 등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애들도 이해하고 좇아온다. 이런 것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한다고 풀어야 하나?
- 현재 문제학생을 징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기껏해야 교내외 봉사명령과 1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데 이걸로는 학생지도 못한다. 실효적인 제재방안이 있어야 한다.
- 왕따나 괴롭힘에 대해 보다 자세한 기준과 지침, 행동요령이 요구된다.
- 야자 좋아서 하는 선생님들 없다. 그런데 안 하면 지역사회에서 찍히니까 할 수 없어 한다. 고교순위발표로 더 할 수 밖에 없고 이제 중학교도 할 것 같다. 정부가 야자 조장한다.
- 야자 안 하면 학원으로 간다. 오래 붙드는 학원일수록 인기가 좋다. 학원심야교습 뿌리뽑아야 한다.
- 대입제도 건드리지 않고 학생인권, 야자금지 등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 야자 기본원인은 학부모/사회 바람이지 학교당국에 있지 않다. 학교건 학원이건 밤10시 이후 교습은 금지시켜야 한다.
- 두발은 아무리 길어도 직접 자를 수 없어 단속이 안 된다. 염색 포함해서 완전 자유화해도 지장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참가교사들의 2/3가 찬성함)
- 비행학생, 문제 학생들은 지역스포츠 문화센터 등과 연계시켜서 흥미있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